

한국 선거에서의 기권자들에 대한 합리적 선택론적 설명

장 원 호*

I. 머리말

투표행위(voting behavior)의 분석에서 매 선거마다 일관적으로 다루어지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다. 하나는 사람들은 왜 투표를 하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였다면 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 후보를 선택했는가 하는 점이다(who votes and what determines the vote). 본 논문은 이러한 두 연구 주제 중 투표/기권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만약 투표자와 기권자가 아무런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투표/기권의 문제는 단순히 투표당일 개인들의 특정한 사정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권자는 투표 당일 몹시 아팠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갑자기 투표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거나 하는 등등의 사유로 투표하지 못했다고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투표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것은 투표자와 기권자 간에는 매우 뚜렷한 사회인구학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구의 투표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발견되는 투표자와 기권자의 차이는 교육수준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즉,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회인구학적 차이도 상당히 일관성 있게 발견된다. 즉, 하류층의 사람들보다는 중·상류층의 사람들이 보다 많이 투표한다든지, 연령과 투표율(turnout rate)은 커브리니어 관계를 보이는데, 특정 연령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투표율도 증가하다가 특정 연령 이상부터는(대체적으로 70대 이상) 투표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 역시 서구의 투표행위에서 일관성 있게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직업과 투표율 간에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문가나 관리직의 투표율이 농업이나 단순 노동 종사자의 투표율보다 일반적으로 높다(Niemi and Weisberg 1993).

이러한 투표자와 기권자 간의 사회인구학적 차이에 대해 여러 설명이 제시되어 왔다. 예를 들어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유권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투표하는 경향이 높은 현상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적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할 능력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 지식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정치적 관심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투표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데 투표가 그 수단인 하나이기 때문에 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는 것이다(Rose and Wolfinger 1980). 연령과 투표율의 관계에 대해서는 젊은 층은 사회적 이동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지역구의 후보자에 대한 지식이 적어 정치적 관심도가 떨어지는 반면, 중년층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주거상의 이동이 적어 자신의 지역구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보다 많이 알게 되고 이것은 결국 지역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젊은 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선거와 같은 전국적 선거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책임의식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한 책임의식의 표현이 높은 투표율로 나타난다는 설명도 있다. 소득과 관련된 설명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특정 정책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보다 많이 투표한다는 설명도 있고, 소득 자체보다는 소득과 교육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견된다는 설명도 있다. 성별과 투표율의 관계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치적 관심도 및 이해도가 높아서 여성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는 설명이 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생활이 급속히 증가한 지금은 그러한 차이가 사라지고 있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다. 직업과 투표율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나 관리직이 농업종사자나 단순 노동 종사자 보다 정치적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기에 투표율이 높다는 설명과 두 직종이 교육과 깊은 양의 상관관계(correlation)가 있기에 투표율이 높다는 설명들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들의 가장 큰 약점은 사후적 해석(post-hoc explanation)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특정 이론적 기반 하에서 예측을 하고 투표가 끝난 후 그러한 예측을 검증하기보다는, 투표 후의 결과를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론으로부터 출발하여 경험적 자료를 통해 이론을 검증하고 재해석하는 일반적인 과학적 방법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럴 경우, 매 선거가 끝난 후, 투표 경향을 새롭게 해석해야 하는데, 이것은 일찍이 호만스가 지적했듯이 일반화를 추구하기 어려운 방법론인 것이다. 특히, 서로 다른 문화의 두 사회의 투표율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는 더욱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우리사회의 투표율과 사회인구학적 관계는 서구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과 투표율과는 대부분의 선거에서 서구와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구의 투표율 연구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야말로 투표율을 설명하는 가장 견고한 지표가 되고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은 것은 서구에서는 하나의 공리와도 같은 사실이다. 하지만, <표 1>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우리나라와 일본은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낮다. 직업과 투표율과의 관계 또한 그러한데,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전문직, 관리직일수록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다. 한편, 소득과 투표율의 관계, 연령과 투표율의 관계는 서구의 현상과 비교적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전술한 사회인구학적 접근의 사후적 해석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서구에서는 교육이 정치적 관심의 증가와 투표 참가로 연결되

는데, 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교육이 정치적 관심 또는 투표 참가와 역의 관계를 가지는지를 전술한 사후적 해석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표 1〉 한·미·일 삼국의 투표율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미 국	일 본	한 국
성별	성별 투표율의 차이가 없음 (남성의 투표율이 약간 높음)	성별 투표율의 차이가 없음 (남성의 투표율이 약간 높음)	성별 투표율의 차이가 없음 (남성의 투표율이 약간 높음)
연령	나이가 들수록 투표율이 높음	나이가 들수록 투표율이 높음	나이가 들수록 투표율이 높음
교육	교육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음	교육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낮음	교육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낮음
직업	전문직의 투표율이 매우 높음	전문직의 투표율이 약간 낮고 학생의 투표율이 매우 낮음	전문직의 투표율이 약간 낮고 학생의 투표율이 매우 낮음
수입	수입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음	수입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약간 높음	수입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약간 높음
기타	백인일수록 투표율이 높음	도시지역의 투표율이 낮음	도시지역의 투표율이 낮음

출처 : Abramson et al. 1999.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1996 and 1998 Elections*, Washinton DC: CQ Press. 蒲島郁夫.1992. 『政治參加』東京大學出版會. 한국사회과학데이터 센터 선거자료, 1992 - 2002.

본 연구는 한국선거의 투표/기권에 대하여 이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연역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특히, 다운스(Downs 1957) 이후 발달해온 합리적 선택론에 입각한 투표/기권이론을 준거틀로 하여 한국의 투표/기권을 분석하고자 한다. 설명의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또 일부는 학문적으로도 주장되었던 두 가지의 시각- '도저촌고(都低村高)' 현상을 주로 설명하는 시각과 한국 특유(Korea-specific)의 지역주의에 바탕한 시각-을 합리적 선택론과 비교하면서 분석할 것이다. 특히, 투표/기권과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합리적 선택론에서 중시하는 변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회인구적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각 변수들의 고유한 영향력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합리적 선택론이 한국의 기권자들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권자 집단과 서구의 기권자 집단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다운스(Downs 1957) 모델에 새로운 이론적 수정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투표/기권의 영역에 새로운 이론적 논의를 위한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II. 이론적 검토

한국의 투표/기권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시각으로는, 한국의 대부분의 선거에서 일관적으로 발견되는 이른바 '도저촌고(都低村高)'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윤천주는 근대화론에 입각한 정치문화적 설명을 제시하는데, 근대적 정치문화가 낮은 농촌에서는 준봉투표(conformity voting)에 의해 투표율이 높은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관심투표(interest voting)를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다는 것이다(윤천주 1989). 김종립(Kim 1980)은 동원투표(mobilized voting)로서 도저촌고를 설명하고 있는데, 공동체 의식이 약하고 분화된 사회구조를 갖고 있는 도시보다 공동체 의식과 위계질서가 남아 있는 농촌에서 동원 압력의 채널도 많고 그 효과도 크기 때문에 도시보다 농촌의 투표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최근의 선거에서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투표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견 여전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해방 이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산업화, 도시화가 진척되었기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근대화된 상황에서 공동체 의식과 위계질서가 과연 어느 정도 투표율을 설명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러운 것이다. 또한 정치의식도 과거보다는 성숙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도시-농촌간의 투표율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다 입체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즉, 현재 투표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농촌간의 투표율 차이는 보다 다른 요인- 예를 들어 도시-농촌 간 학력이나 연령의 차이 등-에 의해 기인한 것일 수 있다.

한국의 투표/기권을 설명하는 또 다른 시각으로는 지역주의에 입각한 설명을 들 수 있다. 이 설명은, 한국의 선거에서 누구를 찍을지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후보자가 자기 지역 출신인가 하는 점이고 이것이 바로 투표율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시각이다. 즉, 자기 지역 출신의 후보자가 있는 경우,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기존의 학문적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상식적 차원에서나 정당지지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암묵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시각이라 하겠다(蘇淳昌 1997, 조기숙 2000, 최영진 1999). 이 설명은 그 지역출신 후보자끼리의 경쟁이 주로 이루어지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보다는 대통령 선거에서 보다 설득력이 높을 수 있다. 문제는 이 설명에서 주장하는 지역주의가 이론적으로는 다소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이 미시간 학파가 주장하는 정당귀속감에 의한 정체성에 바탕을 둔 것인지, 아니면 지역후보자의 당선 후, 자신에게 돌아올 경제적 이익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입장에 따라 그 설명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기권자 분석과 관련하여, 연역적 분석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적 시각으로는 다운스의 합리적 선택론이 있다. 다운스(Downs 1957)에 따르면 투표자는 투표할 때 기대되는 이익(P : Profit)이 투표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C : cost)보다 크다고 주관적(subjective rationality)으로 판단하는 사람이고, 기권자는 그 반대로 투표 비용이 이익을 넘어선다고 판단한다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식으로 표시하면 투표자는 $PB-C > 0$ 으로 판단하는 사람이고 기권자는 $PB-C < 0$ 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P 는 유권자 개인 한 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관적 확률

이고 B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자신이 얻게 되는 효용과 상대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돌아오는 효용과의 차이를 나타내며, C는 투표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이 이론의 문제는 다운스 자신이 인식하고 있듯이, 대부분의 선거에서는 P의 가치가 무시해도 좋을 만큼 매우 작기 때문에 B의 크기에 상관없이 PB는 C보다 작게 느껴지는 것이다¹⁾. 그렇다면 합리적인 유권자는 투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경험적인 투표율에 비추어볼 때 전혀 맞지 않는 이론이 되고 마는 것이다. 다운스는 이러한 패러독스에 대한 답으로 시민 의무감(civic duty)이라는 개념을 제시했고, 라이커와 오데슈(Riker and Ordeshook 1973)은 시민 의무감을 조작화하여 모델에 추가해서 $PB-C+D(\text{시민 의무감}) > 0$ 인 사람이 투표를 한다고 주장한다²⁾. 하지만, 이럴 경우 가장 큰 이론적 문제점은 행위에 대한 모순적 가정이다. 사회과학 이론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사회적 행위의 동기를 어떻게 가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구합리적 행위(instrumental rationality)를 가정하는 합리적 선택론 등이 있는 반면, 가치 합리적 행위(value-rational action), 전통적 행위(tradition-based action)를 가정하는 이론들이 있다고 할 때, 라이커와 오데슈는 상충하는 행위 동기를 한 모델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다운스의 패러독스는 페어존과 피오리나(Ferejohn and Fiorina 1974)의 최대유감최소화(Minimax model: Minimizing maximum regret)의 이론에 의해 상당부분 보완되었다. 이 이론은 다운스가 가정하는 기대효용의 극대화가 아닌 최대 유감의 극소화를 피하는 사람들을 상정함으로써, 위험을 감수하는 집단(risk taking group)뿐만 아니라 위험을 피하는 집단(risk averse group)을 모두 고려할 때, 현실적인 투표율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론을 바탕으로 한국 선거의 투표/기권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재한(1993)과 김욱(199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재한은 선거가 치열할수록(P가 높을수록), 후보자선호에 차이가 있을수록(B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욱은 주로 시민의무감이라는 항목을 변수화하여 한국의 투표/기권을 분석하고 있다. 이 두 연구는 한국 선거에서의 투표/기권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으나, 전술한 가장 중요한 퍼즐, 즉 서구에서는 교육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은 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교육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낮은 사실에 대해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선거에서의 기권자 특성을 기본적으로 합리적 선택론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적용하는 모델로는 라이커와 오데슈의 시민의무가 포함된 모델이 아닌 다운스의 기본 모델을 적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자신이 선호하고 싫어하는 정당이 뚜렷한 집단일수록,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주는 경제적, 심리적 이익을 높게 인식하게 되고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³⁾(Benefit와 관련된 예측). 또한, 연령의 경우는 김욱(1998)이 해석하였듯이 한국

1) 예를 들어 백만 명이 투표한다면, p는 몇십만 분의 일이라는 매우 작은 값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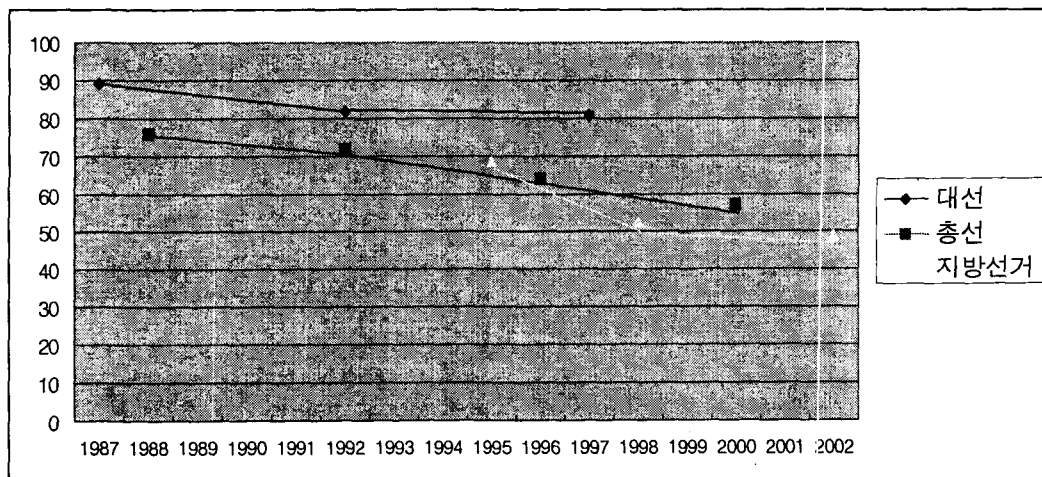
2) 물론 라이커와 오데슈에게 D의 개념은 단순한 시민의무를 넘어서 투표행위가 가져오는 다양한 내재적 만족감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민 의무를 수행했다는 만족감이 D의 주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하겠다.

3) 여기서 심리적 이익이라는 표현이 일견 합리적 선택론과 맞지 않는 인간행위의 전제가 아니냐는 의문이

의 경우, 투표일이 공휴일이기에 나이가 낮은 집단이 투표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나이가 많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나이가 적은 집단이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Cost와 관련된 예측). 즉, 본 연구에서는 라이커와 오데슈의 모델에서 주로 주장하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시민의무감이 높다는 전제를 상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본적인 예측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기권자 집단을 설명할 때 항상 제기되는 퍼즐, 즉, 서구에서는 교육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는데 한국에서는 그 반대의 관계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운스의 모델을 변형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다운스의 기초 모델로 돌아가 보면, 투표자는 $PB > C$ 보다 클 때 투표하게 된다 (Vote, when $PB > C$). 그런데, B에 대한 인식은 후보자 또는 제도를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다운스의 B는 정치가가 제시하는 정책이 자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일 어느 유권자가, 선거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들이 단지 공약(空約)으로 끝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 B는 대단히 작은 것이 되고 만다. 즉 다운스의 B 자체도 $B * p'$ (p' 은 해당 정치가가 공약을 실현할 주관적 확률)로 다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P * (B * p') - C > 0$ 인 경우에 투표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p' 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나라일수록 1에 가깝게 되고 정치적인 변동이 많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작아지게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모델을 바탕으로 분석할 때, 전술한 패러독스가 해결될 수 있다. 즉, 한국과 같이, 정치가들이 자신의 공약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정보 수집과 처리에 드는 거래비용이 적기 때문에 p' 을 낮게 인식하게 되고 결국 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 그림 1 〉 선거별 투표율 변화 추이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합리적 선택론이 제시하는 인간행위가 경제적 인간관이 제시하는 인간행동과 다른 점은 이익의 주관적 판단이라는 데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주관적인 심리적 이익도 모델의 이익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더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대통령 선거(대선)를 다른 선거들, 즉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지방선거들과 구별하여 투표/기권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림 1>을 보면 자명하여 진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대선의 투표율은 기타 선거의 투표율보다 훨씬 높다. 또한, 대선의 경우 1987년의 투표는 오랫동안 투표할 수 없었던 정치적 상황 후의 첫 투표라는 점에서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 나왔고 92년과 97년의 투표율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총선과 지방선거의 경우는 90년대 이후 그 투표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의 기권자 연구에는 기권자의 특성 못지않게 90년대 들어 감소하는 투표율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Ⅲ. 한국의 기권자집단에 대한 합리적 선택론적 가설

전술한대로 본 연구의 투표/기권 모델은 다음과 같다.

$Bp' * P - C > 0$ 일 때 투표.

B =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자신이 얻게되는 효용과 상대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돌아오는 효용과의 차이

p' = 당선된 후보자가 공약을 지키리라 예상하는 주관적 확률

P = 유권자 개인 한 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관적 확률

C = 선거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

위의 모델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국선거의 투표/기권과 관련된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⁴⁾.

1. 대통령 선거의 투표/기권자와 관련된 가설

<가설 1>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출신지역 후보존재 여부가 투표할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의 권력은 지역발전을 위해 절대적이다. 따라서 자신의 지역 출신 대통령이 후보자가 있을 때 효용의 차이(B)를 크게 인식하게 되고 투표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로부터 추론되는 또 다른 가설로는 효용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영호남 대립 후보가 있을 때, 더욱 증폭된다는 것이다. 우리정치의 영호남 갈등은 경제적 차별로 이어졌으므로 영호남 대립이 있는 선거에서는 상대편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의 손해를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되고 투표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가설 1-1> 대통령 선거에서 영호남 후보가 존재할 때, 영호남 유권자가 투표할 확률은 다른 후보지역 유권자보다 높다.

4) 본 연구에서는 다운스가 제시했던 기존 합리적 선택론적 가설 이외에 우리 사회에 보다 적용될 수 있는 가설만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의 투표/기권자 증가와 관련된 가설

<가설 2> 정치적 정보를 쉽게 습득하는 능력이 있을수록 후보자의 공약실현 가능성(p')을 낮게 평가하게 되고 이것은 기권할 가능성을 높인다.

한국과 같이 정치가들이 자신의 공약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할수록 또는 나이가 어릴수록 정보 수집과 처리에 드는 거래비용이 적기 때문에 p' 을 낮게 인식하게 되고 결국 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추론할 수 있는 것은 90년대 이후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데 반해 정치적 관행은 변치 않는 상황에서 위의 집단의 기권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3. 한국적 특수 상황과 관련된 가설

<가설 3-1> 연령이 낮을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투표참여의 기회비용(C)이 크기 때문에 기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연령이 낮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활동이 활발한 집단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투표일에 다른 여가활동의 기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표보다는 기권을 함으로써 누리는 기대효용이 연령이 높은 층보다 높다고 하겠다. 도시 거주자 또한 공휴일에 여가활동 대신 투표를 함을 통해 느끼는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설 3-2> 연령이 낮을수록 도시거주자일수록 투표를 계산적으로 파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한표의 가치(P)를 낮게 평가하게 되고 이것은 기권할 확률을 높인다.

우리 사회가 근대화되는 과정은 70년대 이후라 생각할 때, 기성세대들은 전근대적 시기에 사회화 과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잉글하트가 주장하듯이 한 사람의 가치관은 사회화 시기의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투표에 대하여 규범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젊은 세대는 투표를 합리적인 계산으로 파악하게 되고 그럴 경우 자신의 한 표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쉽고 이것은 결국 기권할 확률을 높이게 된다. 또한 도시에 거주할수록 보다 도구합리적인 경향이 강하므로 투표를 계산적으로 파악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기권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1992년부터 수집해오고 있는 선거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위의 가설들을 검증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대통령 선거와 총선/지방선거의 기권자 집단을 나누어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IV. 대통령 선거에서의 투표/기권 분석

<표 2>를 보면 대선에서의 투표율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지역출신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점이다. 즉, 87년 이후 세 번의 대선에서 평균 투표율보다 웃도는 17개 지역(<표 2>에 굵은 체로

표시된 지역) 중, 자기 지역후보가 있는 지역이 15개 지역이나 된다는 사실은 위의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⁵⁾. 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지역주의에 바탕한 투표행위라고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주의적 해석으로는 자기 지역 출신의 대선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투표율을 밑도는 6개 지역(87년의 부산, 충남지역, 97년의 충남, 충북과 대전지역)을 설명하지 못한다.

〈표 2〉 대선별 투표율(%) 변화

년도 지역	1987	1992	1997
서울	88.1	81.4	80.5
부산	88.4	83.2	78.9
대구	89.9	78.5	78.9
인천	88.1	80.3	80.0
광주	92.4	89.1	89.9
대전	-	80.3	78.6
울산	-	-	81.1
경기	88.4	80.4	80.6
강원	90.7	81.5	78.5
충북	91.0	81.3	79.3
충남	88.3	78.9	77.0
전북	90.3	85.2	85.5
전남	90.3	85.6	87.3
경북	91.0	80.6	79.2
경남	89.5	84.6	80.3
제주	88.5	80.3	77.1
전국	89.2	81.9	80.7

자료: 선거관리위원회

이를 위하여 <가설 1-1>을 적용할 수 있다. 한국 현대 정치사의 여러 경험 속에 자리 잡은 영호남의 갈등은 서로 상대방 지역 후보자가 당선되고 자신이 지지하는 자기 지역 후보자가 떨어졌을 때를 비교할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의 차이를 타 지역 사람들보다는 훨씬 크게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타 지역보다 훨씬 높은 투표율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선에서

5) 87년의 강원 지역과 97년의 울산지역이 예외임.

의 지역별 투표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으로 자기 지역 출신 후보가 있느냐하는 것과 영호남 후보의 경쟁 상황이 존재하느냐하는 것을 제시한다. <표 2>를 보면, 이 두 전제를 만족시킨 지역의 투표율은 모두, 다른 지역의 투표율을 훨씬 웃도는 것을 알 수 있다⁶⁾. 이러한 설명은 총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를 범할 가능성은 있지만, <표 2>는 본 연구의 합리적 선택론적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개인 서베이 자료를 바탕으로 대선에서의 투표/기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보겠다. <표 3>은 한국 사회과학 데이터 센터가 실시한 선거후 조사를 바탕으로 97년 대선에서의 투표/기권 분석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1997년 대통령 선거 투표/기권 분석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 수	회귀계수	Wald	Significance	
성별 (여성대비 남성)	.079	.088	.766	
연령	-.056	17.166	.000	
교육 대재 이상 (중졸 이하 대비) 고졸	.347 .690	.386 1.756	.535 .185	
수입	-.043	.548	.957	
거주지 대도시 (군지역대비) 중소도시	-.085 .208	.045 .279	.832 .597	
직업 전문직 (농림어업 대비) 사무직	.095 -.192	.014 .069	.906 .792	
	판매서비스	-.191	.074	.786
	생산직	-.553	.419	.517
	학생	-.190	.059	.808
	주부	-.742	.922	.337
	기타	.357	.230	.631
후보 후보있음 (무후보대비) 후보+영호남	.259 -1.486	.447 4.052	.504 .044	
정치적 미성숙	-.145	.889	.346	
합리적 계산	.790	31.439	.000	
공약실천불신	.278	2.307	.129	
Model Chi-Square: 87.242 (Significance: .000)				
-2 Log likelihood: 532.168				

자료: 사회과학 데이터 센터 2000년 총선 자료

* 모든 회귀 계수는 기권의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음. 따라서 양의 계수가 의미하는 것은 그 변수의 속성이 증가할수록 기권할 odds가 높다는 것이고 음의 계수는 그 변수의 속성이 증가할수록 투표할 odds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6) 단 하나의 예외가 87년 부산지역이다. 그러나 이것은 87년의 영호남 경쟁이 주로 노태우와 김대중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다.

<표 3>의 변수를 설명하면, 먼저 '후보' 변수 중 '후보 있음'은 대선후보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후보+영호남'은 대선후보와 영호남 경쟁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합리적 계산' 변수는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이 하기에 자신의 투표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항목으로 작성되었고 '공약실천불신' 변수는 '정치인은 당선 후 선거 때와는 다른 행동을 함'이라는 항목으로 작성되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정치문화에 입각한 투표행위 설명과 합리적 선택론을 비교 검증하기 위하여 '정치미성숙' 변수를 '정치나 정부일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항목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기존의 정치문화 이론에 따르면 정치적 미성숙이 높을수록 준봉투표를 함으로써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 결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교육수준, 수입, 도시-농촌 등은 대선에서의 투표/기권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미성숙도 투표/기권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기존의 정치문화이론은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의미가 있는 변수로는 연령과 후보, 합리적 계산임을 알 수가 있고 이 모든 변수는 이미 합리적 선택론적 모델에서 예견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연령의 경우는 기대효과의 차이에서 오는 비용(C)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은 <가설 3-1>을 지지하는 결과라 하겠다. 영호남의 후보출마 지역은 총계 자료의 결과와 일치하고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합리적 계산' 또한 <가설 3-2>에서 제시된 바 있다. 한가지, '공약실천 불신'과 기권의 관계가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회귀계수가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고 유의확률이 의미 있는 수준에 접근한 것으로 볼 때, 보다 정교한 척도를 개발한다면, 충분히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⁷⁾.

V.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투표/기권 분석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투표/기권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90년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는 기권율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기권자 증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제시될 수 있지만, 합리적 선택론적 입장에서 그리고 본 연구가 제기했던 공약실천불신(p')의 개념에 입각하여 설명한다면, 정치가와 정치 제도에 대한 불신이 투표자체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기권을 증가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권을 증가를 가져온 주된 집단으로는 정치제도와 정치가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집단을 들 수 있다. 즉, 위에서도 제시하였지만, 먼저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보다 많은 정치 정보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류층일수록 고급 정보를 소유할 자원이 많다는 점에서, 도시에 거주할수록 다양한 네트워크 속의 사회적 교류를 통하여 보다 많은 정치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들이 기성세대보다 더욱

7) 실제로 대선 설문에는 '공약실천 불신'의 변수로 인정되는 항목이 두개 더 있었다. 하지만, 총선과 지방선거와의 비교를 위해 한 항목만으로 변수를 통일하였다. 다른 두 항목을 포함하여 세 항목으로 '공약실천불신' 척도를 만들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한 결과 매우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학력, 상류층, 저연령, 도시 거주자들의 기권을 증가가 다른 집단보다 클 것으로 예측된다.

〈 표4 〉 총선 및 지방선거의 기권율(%) 변화

연도 유형별		총 선			지방선거		
		1992	2000	차이	1995	2002	차이
성 별	남	12.4	25.7	13.3	10.9	28.6	17.7
	여	15.6	24.8	9.2	14.0	28.8	14.8
연령 별	20대	24.1	45.3	21.2	22.5	52.9	30.4
	30대	15.8	27.6	11.8	12.7	33.1	20.4
	40대	6.6	14.7	8.1	5.3	20.6	15.3
	50대 이상	7.8	12.5	4.7	5.0	10.5	5.5
조사 지 구 모	대도시	17.1	28.8	11.7	13.0	33.0	20
	중소도시	12.3	26.1	13.8	16.8	31.5	14.7
	군지역	9.2	15.9	6.7	6.8	15.8	9
교육 정 도	중졸이하	9.4	14.4	5.0	8.8	14.4	5.6
	고졸이하	18.1	25.9	7.8	11.4	27.2	15.8
	대재이상	14.5	33.1	18.6	17.7	37.8	20.1
생활 수 준	상	13.0	25.5	12.5	15.3	29.9	14.6
	중	13.5	27.4	13.9	11.9	31.0	19.1
	하	15.7	18.3	2.6	11.5	21.7	10.2
직업 유 형	전문관리직	16.7	26.4	9.7	6.1	30.1	24
	사무직	18.4	23.6	5.2	19.2	28.8	9.6
	판매서비스	17.4	26.8	9.4	12.5	24.4	11.9
	농어민	2.1	6.3	4.2	2.1	9.3	7.2
	생산직	17.5	31.4	13.9	21.8	30.7	8.9
	주부	11.7	20.8	9.1	7.8	24.4	16.6
	학생	13.2	49.4	36.2	21.4	54.2	32.8
	기타	16.1	20.4	4.3	16.1	17.6	1.5
합 계		13.9	25.3	11.4	12.5	23.7	16.2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표 4>를 보자. 1992년-2000년 총선에서의 투표율의 평균 감소율은 11.4%인데 이것을 넘게 감소한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도시화 정도별로는 대도시 거주자와 중소도시 거주자, 교육수준으로는 대재 이상, 생활수준은 중류와 상류, 그리고 직업으로는 학생과 생산직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생산직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본 연구가 예측하고 있는 방향과 모두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선거의 자료를 보더라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평균 기권을 증가는 16.2%인데, 이를 상회하는 집단으로는 남성, 20대와 30대, 대도시 거주자, 대재 이상 학력자, 생활수준 중이상자, 전문직과 학생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부분 본 연구가 예측하고 있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각 변수들의 고유한 영향력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기권율이 과연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공약실천 불신’이나 ‘합리적 계산’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하고 위의 합리성 변수와 정치적 미성숙 변수를 모델에 포함시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사회과학 데이터 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2000년 총선의 투표/기권 모델을 분석한 것이 <표 5>에 나와 있다. <표 5>를 보면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연령의 영향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인구학적 변수, 예를 들어 교육, 성별, 수입, 직업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기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위의 <가설3-1>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새로운 개념인 p'을 지지해줄 ‘공약실천불신’의 영향력은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5> 2000년 국회의원 선거 투표/기권 분석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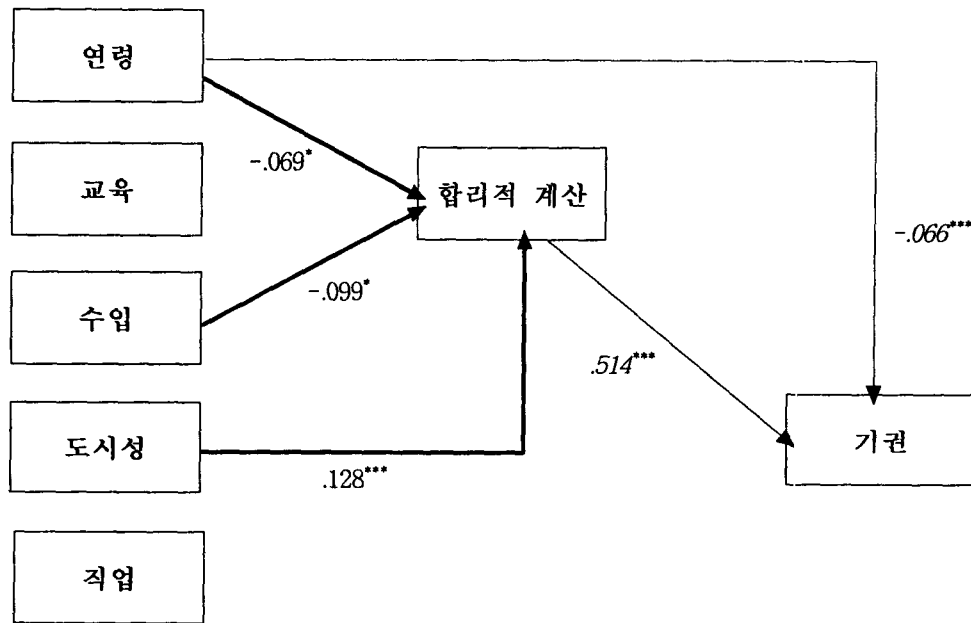
변수	회귀계수	Wald	Significance	
성별 (여성대비 남성)	-.063	.112	.738	
연령	-.066	48.064	.000	
교육	-.116	.686	.407	
수입	.034	.611	.435	
거주지 (군지역대비)	중소도시 대도시	.356 .367	2.166 2.000	.141 .157
직업 (농어업대비)	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 생산직 학생 주부 기타	.524 .516 1.032 1.146 .737 .629 .822	.551 .668 3.016 2.939 1.236 1.048 1.636	.458 .414 .082 .086 .266 .306 .201
정치적 미성숙	.106	2.150	.143	
합리적 계산	.514	50.794	.000	
공약실천불신	-.083	.973	.324	
Model Chi-Square: 199.447 (Significance: .000)				
-2 Log likelihood: 1044.238				

자료: 사회과학 데이터 센터 2000년 총선 자료

* 모든 회귀 계수는 기권의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음. 따라서 양의 계수가 의미하는 것은 그 변수의 속성이 증가할수록 기권할 odds가 높다는 것이고 음의 계수는 그 변수의 속성이 증가할수록 투표할 odds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합리적 계산' 변수 또한 매우 강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가설 <3-2>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새로운 분석이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그것은 '합리적 계산'이 과연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도시성과 연령과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합리적 계산을 종속변수로 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가설 3-2>가 예측한 바와 같이 연령과 도시성이 합리적 계산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그 결과를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와 합쳐서 하나의 경로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국회의원 선거의 기권자 분석 모델



*: $p < .05$
 **: $p < .01$
 ***: $p < .001$
 Italic: 로지스틱회귀계수
 Bold: 다중회귀분석의 Beta 계수

이제 지방선거에서의 기권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6>은 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2002년 지방선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인구학적 변수에서 '연령'은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즉, 나이가 젊을수록 기권할 확률이 높고 이것은 위의 가설 <3-1>을 지지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도시에 거주할수록 기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의 여초야도의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일수도 있고 <가설 3-1>이 설명하듯이 도시거주자가 투표를 통해 얻게 되는 기회비용이 농촌

거주자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표 6〉 2002년 지방선거 투표/기권 분석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회귀계수	Wald	Significance
성별 (여성대비 남성)	-.211	1.556	.212
연령	-.072	90.507	.000
교육	-.093	1.148	.284
수입	.001	3.566	.059
거주지 중소도시	.967	19.346	.000
(군지역대비) 대도시	1.036	20.174	.000
직업 전문직	.236	.250	.617
(농어업대비) 사무직	-.044	.009	.925
판매서비스	-.078	.033	.856
생산직	.294	.347	.556
학생	-.119	.059	.808
주부	-.117	.066	.798
기타	.652	2.195	.138
정치적 미성숙	-.081	1.867	.172
합리적 계산	.419	52.703	.000
공약실천불신	.158	3.692	.055
Model Chi-Square: 259.701 (Significance: .000)			
-2 Log likelihood: 1239.549			

자료: 사회과학데이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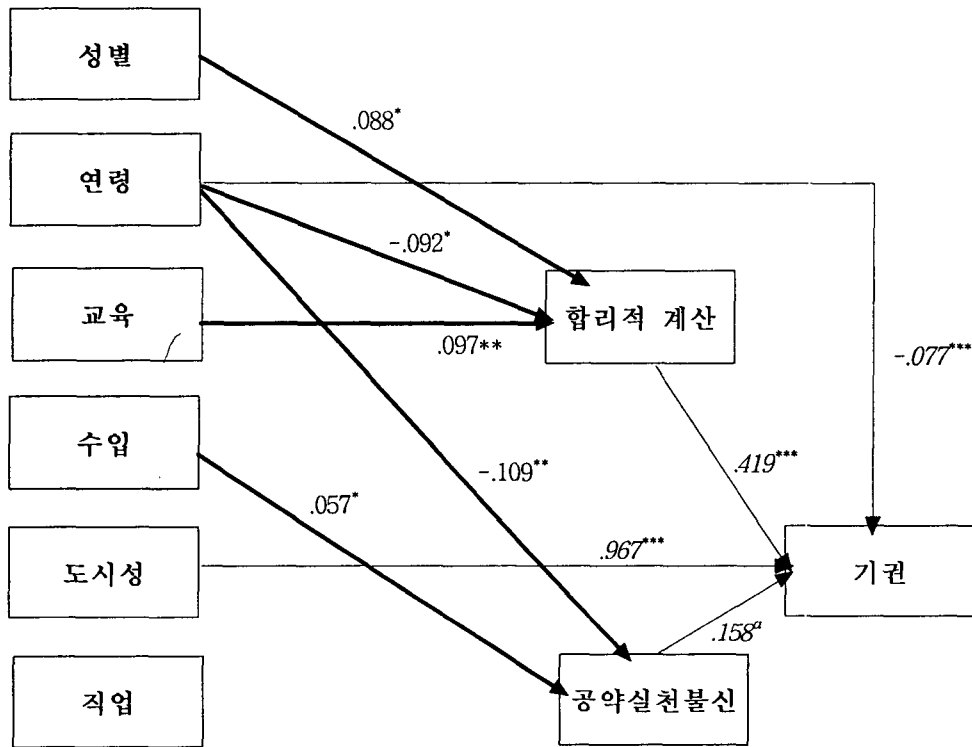
* 모든 회귀 계수는 기권의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음. 따라서 양의 계수가 의미하는 것은 그 변수의 속성이 증가할수록 기권할 odds가 높다는 것이고 음의 계수는 그 변수의 속성이 증가할수록 투표할 odds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표 6〉에서는 또한 본 연구의 주된 개념인 ‘공약실천불신’ 변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나타났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선거후에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적다고 느낄수록 기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총선의 경로모델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합리적 계산’과 ‘공약실천불신’을 종속변수로 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3〉은 그 결과를 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결과와 합친 경로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연령은 기권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수입이 높은 집단일수록 공약실천을 불신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것은 결국 기권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합리적 계산을 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에 따라 기권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림 3>의 의미 있는 결과들은 대부분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방향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 지방 선거의 기권자 분석 모델



VI. 맺는말

본 연구는 몇 가지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합리적 선택론에 입각한 변수로서 투표/기권을 다변량 분석함으로써, 도시-농촌의 차이나 지역주의로 투표/기권을 설명하려 했던 기존의 연구나 상식적 믿음을 반증하고, 보다 정치된 학문적 분석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한국적 정치상황에서의 기권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다운스의 합리적 선택론 이론에 이른바 공약실천확률(p')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데이터의 성격상, 체계적인 분석은 불가능하였지만, 새로운 개념의 활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또한 사회인구학적 속성에 따른 기권율의 차별적 변화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도 합리적 선택론적 시각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90년의 급속한 기권율 증가를 특

정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훨씬 급격한 기권을 증가를 보였기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한국의 정치제도와 정치가의 문제를 보다 많이 알고, 따라서 공약의 실천(p')을 의심하는 고학력층, 상류층, 저연령층, 도시거주자 집단이라는 사실을 본 연구는 경험적 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본 연구가 사용한 데이터로는 '합리적 선택' 변수나 '공약실천 불신' 변수를 척도화하여 측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 점이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공약실천불신' 변수의 영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 다른 문제점은 '공약실천불신'에 미치는 교육이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과 연령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것은 향후의 연구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참고문헌

- 김욱, 1998. "투표참여와 기권"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II: 제 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푸른길.
- 김재한, 1993. "투표참여의 합목적성: 14대 대선에서의 기권행태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 정치》 9 (1).
- 이남영 1993. "투표 참여와 기권: 제 14 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나남.
- 윤천주, 1989. 『투표참여와 정치발전: 속 우리나라의 선거실태 증보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기숙. 1996. 『합리적 선택: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 한울 아카데미.
- 조기숙, 2000.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나남출판
- 최연진, 1999. 『한국 지역주의와 정체성의 정치』 도서출판 오름
- Abramson et al. 1999.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1996 and 1998 Elections*, Washinton DC: CQ Press.
- Downs, A.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 Ferejohn John A. and Morris P. Fiorina. 1974. "The Paradox of Not Voting: A Decision Theoretic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 Flanigan William H. and Nancy. Zingale. 1998. *Political Behavior of the American Electorate*, Wasghington: CQ Press.
- Kim, Chong-Lim. 1980.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Democracy, Mobilization, and Stability*, Santa Barbara: Clio Books
- Miller, Warren E. and J. Merrill Shanks. 1996. *The New American Vot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iemi R. and H. Weisberg. 1993. *Controversies in Voting Behavior*, Washington: CQ press.
- Popkin, S. 1991. *The Reasoning Vot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iker, William and Peter Ordeshook. 1973.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olitical Theory*,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Wolfinger R. and S. Rosenstone. 1980. *Who Vot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蒲島郁夫.1992. 『政治參加』東京大學出版會.
- 蘇淳昌, 1997. "韓國地方選の地域主義と政黨支持" 『선거연구』 12호 pp. 231-47.